

#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로 경제 선순환 도모해야”

## 민주당, 연금개혁 토론회

연금 예비 수급자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하자는 주장과, 보장성을 강화해 소득 재분배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로 은퇴 이후 ‘적정한 삶은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인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발제강연을 통해 공적연금에 대해 “노동세대의 자신이 생산한 GDP (국내총생산)의 일부를 퇴직세대에게 배분하는 것인데, 이를 제도화한 것이 연금”이라며 “연금 기금 적립 여부나 기금의 규모보다 노동세대와 퇴직세대의 상대적 규모 및 노동세대의 생산성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엔 노인 인구가 적었던 반면, 생산가능 인구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사회는 취업 연령이 늦어지고 빠르게 고령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퇴직 인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재정안정론에 기반해 연금 민영화한 남미 국가들의 예를 들었다. 이들 국가들은 연금 민영화를 추진한 결과, 노후 빈곤 예방 실패, 가입률 감소, 비효율적 관리 등을 초래해 연금의 제공영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지난 2019년 재정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다수안 합의의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다수안은 연금 급여와 보험료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45%로 올리고 보험료를 현 9%에서 12%로 단계적



민주당이 지난 18일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 왼쪽부터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측 간사, 정세은 충남대 교수, 남찬섭 동아대 교수,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최현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지난 18일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 <노후준비 정도와 노후준비수단으로서의 국민연금 의존도> / 김성주 의원실

구분	노후준비 하고 있다(%)		주된 노후준비수단이 국민연금(%)	
	2005년	2021년	2005년	2021년
전체	52.3%	67.4%	33.9%	59.1%
20대	36.0%	40.9%	33.9%	61.2%
30대	66.5%	74.1%	30.0%	60.1%

현재, 연금 도입된 1988년도보다 상대적으로 퇴직인구 비중 커져

연금급여·보험료율 동시에 인상 경사노위 ‘다수안 합의’ 주목해야

5년마다 연금재정 추계 계산되면 ‘재정안정론 우선’ 분위기 형성

으로 인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남 교수는 단기적으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소득 비례연금 강화로 저소득 노인 발생 자체를 감소시킨 캐나다의 예를 들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제자인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재정추계의 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가 계산되면, 재정안정론이 우선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며 “미래 70년 동안의 경제를 전망하고 그 아래서 보험료 지급이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최저출산률, 은퇴 연

령, 생산인구 부족, 생산성 등 확정적인 미래 전망이 아닌 핵심 변수의 비관적인 미래 가정에 기초한 추산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재정안정론에 입각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대폭 인상돼 경제 불안정과 소비 부진을 초래한다는 것도 반박했다. 오히려 공적연금에 대규모 기금을 쌓은 것이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에 참여한 신성식 복지전문 기자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만큼 자원 조달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기자는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 충분성이 공적연금의 신뢰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0·30세대가 90%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지 말지 모르는 상황인데, 미래 지속가능성을 보고 필요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2004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을 한 일본도 단계적 보험료율의 인상과 소비세로 재원을

일부 확보하는 등 국민적 저항을 낮췄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연금개혁 당시 보험료율 4.5%포인트(p)를 1년에 0.354%포인트씩 서서히 올려 저항을 낮췄다. 또 소비세를 5%에서 10%로 인상해 인상분의 일부를 연금 재정에 투입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작동이 안 되는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작업도 이번 개혁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광범위한 사각지대, 가입기간 부족 등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 특수고용직·프리랜서·자영업자들이 사각지대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고 있다”며 “소득 발생 부분에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이 높아질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전국민고용보험제를 하면서 실시간 소득과파이가 가능해졌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국제청이 원천징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 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입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 1면 ‘처벌 없는 중대재해법’서 계속

## 현행 중대재해법에 경영계 “불안” 호소 노동자 “있으나 마나”

징역형에 벌금도 최대 10억 원으로 사업주 처벌 수위는 높인데 정작 어떤 사고가 처벌 대상인지, 정확히 처벌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영계는 불명확한 법 때문에 경영이 불안하다고 호소한다. 노동자들은 수사나 재판만 길어지고 처벌 사례는 없어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비판한다.

현행 중대재해법이 사실상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어 ‘중대 예방법’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봤는데, 경영주 처벌을 면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돼 온 거 같다”며 “빨리 기소되고 판결 사례가 나오면 기업에 주는 메시지가 컸을 텐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법 시행 초기보다 긴장도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뉴시스

## 전남의 새로운 미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대한민국 기초과학과 첨단산업 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 EUV광원, 미세가공



**의료, 생명공학**  
· 소형 암 치료기



**우주항공, 국방**  
· 특수 소재, 우주광통신



**에너지**  
· 핵융합, 무선 전력 전송

**초강력레이저연구시설은?**

초고출력과 고에너지에 기반한 레이저를 활용하여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산업적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복합연구시설



**전라남도**  
Jeollanamdo